튤립→바다이야기→비트코인… 돌고도는 버블의 역사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⑫ 가상통화 열풍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흡사해 가격 널뛰기 지속돼 가치 의문도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는 '아노말리'는 합리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기 힘든 비이성적 행태를 지칭한다. 아노말리는 때론 사회적·경제적 병폐를 낳는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 가상화폐(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논리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도 부른다.

◆'21세기판 튤립'을 꿈꾸는 투기꾼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7세기 네덜란드, 귀족과 신흥 부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황제튤립'이라고 불리는 희귀 튤립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튤립 가격은 1개월 만에 50배나 급등했다. 1624년에는 황제튤립 한 뿌리값이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올랐다.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르자 상업적으로 튤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절에 상관없이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연중거래, 선물거래 제도가 도입됐다. 1636년쯤에는 이중삼중의 문서거래까지 이뤄졌다.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다수였다.

결국 1637년 2월 공황이 발생해 튤립 가격은 폭락했다. 최고치 대비 수 천 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투기 목적으로 튤립 재배에 혈안이던 사람들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됐고 파산자가 속출했다. 이때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해 거래액의 5~10%만 지불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는 이같은 튤립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은 점 등이 닮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을 언급,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이와 마찬가지임을 주장하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로 오르면서 "거품의 영역(bubble territory)"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화폐에 끼어있는 거품이 금융시장의 버블 뿐만 아니라 1634~1637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마저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손 놓은 정부

지난해 9월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가상화폐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위나 해킹대금으로 가상통화를 주고받는 불법행위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후 거래실명제를 통한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외국인 및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법적 제재도 가했다.

정부 규제에 불확실성이 강해진 데다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지난해 12월 중 2000만원을 돌파했다가 6월 중 6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반복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여전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7300달러를 돌파해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리플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4000%나 치솟았다.

그 사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열심히 배를 불렸다. 상반기 실적이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 백 억원에서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9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3030억6000만원, 영업이익은 2186억3000만원이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순이익은 19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이후 손을 놓고 있다.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가치 높아질 것"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가격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 자체에 의문을 갖는 비관론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투기를 넘어서 사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세계적 현상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는 금지됐지만 코인을 발행해 공개하는 코인공개상장(ICO)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투자 상품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가 가져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립토루블(cryptoruble)', 스웨덴은 '에크로나(ekrona)' 등 국가 공인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제대로 결합할 경우 거래 수단 이상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 외에 계약서,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닌다. 비트코인에 블록체인 플랫폼 기능을 더한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투기에서 투자로'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이나 목적이 세분화된 다양한 가상화폐의 사용이 증가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1인가구 10명중 7명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남자보다 여자 만족도 높아 '가성비' 중심 소비 나타나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다고 느꼈으며, 남자보다 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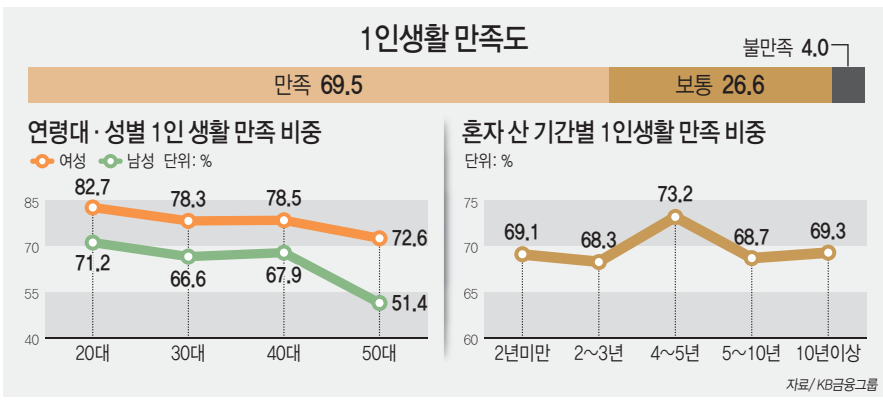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순자산은 1억2000만원이며, 소비는 '가성비'를 중시했다.

KB금융그룹이 30일 내놓은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59세 1인 가구 고객 2100명 중 69.5%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했다.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72.6%로 남성 51.4%를 웃돌았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27.9%로 가구원 수 기준 가장 높다.

1인 생활의 장점으로는 70% 이상(1+2순위)이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을 장점으로 꼽았다. 40대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생활'을, 젊은 세대일수록 '여가활용'을 장점으로 생각했다.

1인 가구가 1인생활을 시작한 동기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가 80.8%(1+2순위)로 가장 많았다.



20대의 경우 '학교·직장 때문'이 60.9%로 높게 나타나며, 40대는 '배우자를 못 만나서', 50대는 이혼이나 사별, 자녀 분가 등의 사유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35.5%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절반 가량은 결혼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9%는 결혼·재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언젠가는 결혼하겠다'는 의향이 남성보다 빠른 30대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40·50대에는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1인 가구는 월 지출액의 절반 가량을 식음료비(33%)와 월세·관리비(21%)에 쓰고 있었다. '혼자 식사하기'와 '혼자 쇼핑하기'에 익숙하다는 응답이 각각 76.5%, 60.1%에 달했으며 향후 1년 내 가장 하고 싶은 행동은 '혼자 해외 여행 가기'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가성비' 위주의 소비패턴을 보여줬다. '구매 전에 여러 곳을 충분히 비교하고'(58.5%), '쇼핑 전 목록을 작성하며'(43.8%), '대형할인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자주 구매'한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전체적으로는 금융서비스 채널별 이용 의향은 '모바일 뱅킹'이 가장 높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낮았다. 은행 지점 방문 의향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50대의 은행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20~40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1인가구는 순자산은 약 1억2000만원, 부채 1900만원을 보유했다. 자산 중 약 40%는 거주용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인 42%를 소폭 밑돌았다.

2012~2017년 중 1인가구의 연평균 순자산 성장률은 5.1%, 부채 증가율은 5.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대비 자산 성장률은 높고 부채 성장률은 낮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12월까지 전국 임대주택 1만3000여가구 공급… 수요자 관심↑

10~1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 1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기존 아파트 전세 기간인 2년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임대주택 물량은 전국에 27곳에서 총 1만32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월별로 보면 ▲10월 4919가구(37%) ▲11월 3118가구(23.5%) ▲12월 5,252가구(39.5%)다.

〈10~12월 주요 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

지역	단지명	면적(㎡)	공급물량	공급시기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일대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	24~59	718	10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A2블록	공공임대주택	51~59	786	10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A10블록	공공임대주택	51~59	526	10월
세종시 다정동 2-1 생활권 M6블록	국민임대주택	26.33~46.01	1,538	11월
대구국가산단 A2-2블록	서한e스테이	66~84	1,038	하반기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각 사

전국 물량 중 수도권에서 10곳 5433가구, 지방에서 17곳 7856가구가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각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471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됐다. 이어 ▲경상남도 1638가구 ▲세종시 1538가구 ▲충청북도 1326가구 등 순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 보다 10%가량 더 저렴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에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임대기간도 공공임대는 5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4분기에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뉴스테이와는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돼 저렴하다.

여기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낮춘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며,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 하반기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임차인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베트남 경제적 성과 '도이모이' 정책으로 거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개혁정책,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의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쇄신)'라고 불리는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토대로 고도성장, 중소득국가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러시아, 헝가리 등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 부진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중국의 점진주의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를 개혁 대상에 따라 절충적으로 적용한 '부분적 급진개혁(small bang)'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베트남은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시기에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농업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했다. 또 소유권 전환 중심의 적극적인 민영화 대신 부실기업 정리·통합 등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유가격체계를 도입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고, 대외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이후 베트남은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2000년대 후반 중소득국에 진입했고, 현재는 2·3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베트남 정부는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국영기업 개혁 지속 등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주 기자 hj89@